

# G-Welfare Weekly Report

## 01

### 중앙정부 정책동향

#### 1. '65세, 더 이상 노인이 아닌가?' 일본의 사례

##### 01 '고령자' 재정의, 의료제도 및 연금 등 신중한 검토

- 일본은 2013년부터 노인의학회와 노년학회를 중심으로 '고령자'의 정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음
- 일반적으로 노인은 65세 이상이지만 신체능력으로 볼 때 75세 이상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 재검토를 진행중이며 단지, 의료제도 및 연금 등의 설계에도 영향을 미침으로 신중히 시간을 두고 검토할 예정임(아사히신문, 2013.7)
- 현재 고령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1956년 국제연합(UN)에서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하여 전인구에 대한 65세 이상의 비율을 고령화율로 하면서 기준이 되어 고령자를 65세 이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화됨
  - 일본의 경우, '전기고령자' (65~74세), '후기고령자' (75세 이상)로 정하고, 고령화율은 65세 이상으로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일본 총무성 인구추계 활용)
- 최근 신체능력이 높은 고령자가 증가하여 『전기고령자(65~74세)는 고령자로 부를 수 없는 집단이 아닌가?』(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연구소 스키소장) 라고 지적. 이에 일본 노년학회 등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검토회에서, '고령자' 재정의에 들어감. 단, 사회적, 정치적인 영향이 커서 '정의' 변경의 장·단점도 포함하여 논의 중임
- 노년학회는 '고령자'를 정의하는데 있어 개인의 건강이라는 시각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회가 연결'되는 넓은 시야에서 고령화를 바라볼 것을 강조하였으며, 간호학, 개호학, 복지학, 사회학, 이학, 공학, 심리학, 경제학, 종교학, 윤리학 등 타 영역과 협동으로 고령자의 '사회참여, 사회공헌'을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일본노년학회 노화분과회의 보고서(2014.9))

노년의학, 노년학  
부분에서 고령자  
재정의 논의를  
시작

신체능력을  
기준으로 75세  
이상을 고령자로  
검토

##### 02 한국에의 시사점

- 초고령사회인 일본에서도 '고령자 재정의' 논의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2018년 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의 상황을 바탕으로 한 노인연령 조정 공론화가 요구됨
- 따라서 다양한 분야(사회, 경제, 정치 등)의 신중한 검토를 위한 충분한 시간 할애 필요
  - 고령화, 저출산 과제는 비단 한국, 일본만의 과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임
  - 의료제도, 연금 등의 설계에도 영향을 미침으로 넓은 시야에서 맥락적인 검토 요망

타 제도 설계에  
영향을 고려한  
넓은 시야의 검토  
요망

## 2. 공무원 연금개혁

### 01 배경

- 신규공직자 수의 감소와 기대수명의 증가로 1995년 공무원연금기금이 고갈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 3차례 개정이 있었으나 재정적자는 늘어남
- 1990년, 현직 공무원 30명이 1명을 부양했으나(부양률 3.1%), 2013년에는 3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부양률 33.8%)에 직면, 연금 재정수지 부족액도 2014년 2조 5천억원, 2015년 3조원 등으로 증가하여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짐
-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등 3대 직역연금 개혁 계획(2014. 2.)을 발표하고, 같은 해 10월 與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 12월 공무원연금개혁특위·국민대타협기구 구성 결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함
- 기여율 증가폭과 지급률 감소폭,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의 논란 속에서도 여야간 합의안을 도출, 2015년 5월 29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개정안 2016.1.1.부터 시행)

공무원연금기금 고갈로 인한 정부의 재정부담 증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통과

### 02 주요내용

- **공무원 연금개혁의 핵심은 '더 내고 덜 받음'**

공무원연금 지급률은 내년부터 현행 1.9%에서 20년에 걸쳐 1.7%로 내리고, 기여율은 7%에서 5년에 걸쳐 9%로 높임. 이로 인해 향후 70년간 약 333조원의 재정부담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추산됨

연금 지급률 1.9%→1.7%  
연금 기여율 7% →9%

〈월 300만원 받는 공무원이 30년간 근무할 경우〉

| 구분       | 현행      | 개정      |
|----------|---------|---------|
| 지급률(수령액) | 월 171만원 | 월 153만원 |
| 본인기여율    | 월 21만원  | 월 27만원  |
| 소득상한선    | 월 804만원 | 월 715만원 |

자료 :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 **세부적으로, 총 11개 부분에서 개정이 이루어짐**

① 연금에 대한 기여율과 부담률의 단계적 인상, ② 퇴직연금액 인하 및 퇴직연금의 소득재분배 개념을 도입(평균기준소득 월액 2015년 1.9%→2035년 1.7%, 1%에 상당 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직 내 연금격차 감소) ③ 연금지급개시연령 연장(65세), ④ 유족 연금액 조정(퇴직연금액의 60%), ⑤ 법 시행후 5년간 연금액 동결, ⑥ 기준소득 월액 상한 하향 조정, ⑦ 연금액 전액 지급정지 대상 확대, ⑧ 기여금 납부기간 연장, ⑨ 분할연금 제도 도입, ⑩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도입, ⑪ 연금수급요건 조정 (20년 → 10년)

- 인사혁신처의 적자보전금 추계에 따르면 개혁안을 통해 기존 3조 657억원보다는 적자가 줄어들었으나 2016년 2조 1689억원 적자가 예상되고, 2025년에는 6조 1144억원으로 적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번 공무원 연금개혁은 재정적자의 증가속도를 늦췄다는데 의의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다시 개혁을 필요로 하는 '절반짜리 개혁'이라는 시각도 존재

재정적자의 증가속도는 늦췄으나 장기적으로 재개혁이 불가피

# 02

## 시도/시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 1. 전국 지자체의 금융복지사업

가계부채의 급증으로 일순간 빈곤층으로 추락한 이들을 포함한 금융소외계층의 '파산·면책, 개인회생, 가정 재무상담 등의 재무 설계를 돕고 각종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사회적 자활을 돕는 지자체의 금융복지 사업들이 진행 중임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복지사업

|     |   |
|-----|---|
| 경기도 | <p><b>‘경기도금융상담센터’ 6월 말 개소 예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센터(1개소):경기신용보증재단, 지역센터(5개소) : 수원역, 의정부역, 안산시 상록수역, 안양시청 민원실, 고양시청 민원실, 센터별로 전문상담사를 배치하여 서민들이 스스로 개인금융(PB)설계를 하고, 서민금융상품, 채무자 구제제도 및 고용·복지사업과 연결되도록 함</li> </ul> <p><b>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개소(2015년 3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련기관과 연계해 금융소외계층과 과다 채무자에게 금융구제방안과 법적 절차를 안내, 부실채권을 저가에 매입해 소각하는 빗탕감 프로젝트를 지난해 9월부터 실시. 33억원의 부실 채권을 매입하여 539명을 구제</li> </ul> |
| 서울  | <p><b>‘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6곳 개소(2013년 7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센터 : 서울복지재단, 1센터 : 서울시청(본관), 2~5센터 : 성동구청, 마포구청, 도봉구청, 금천구청. 상담센터는 기존 재무상담창구, 가계부채종합상담센터 등이 수행하던 대출정보나 채무조정 등 제한된 범위의 상담 분야를 재무설계, 복지서비스와 연계, 법률지원 등으로 확대. 부채관리 및 재무설계 관련 상담을 하고,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필요할 경우에는 금융구제 방안이나 절차 등을 안내함. 또 서울복지법률지원단 상근변호사 등을 통한 법률지원도 진행</li> </ul>   |
| 부산  | <p><b>‘희망 금융복지 지원센터’ 개소(2015년 5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무조정, 재무상담 등을 통해 지역 저소득 취약계층의 신용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자활을 유도하는 역할. 채무조정기관과 서민금융지원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참여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금융 복지 서비스가 가능, 주거, 보육, 의료, 자산 형성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업무 협력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이 한자리에서 금융복지 상담부터 사회복지서비스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상담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li> </ul>   |
| 광주  | <p><b>채무힐링상담센터 안착(2013년 12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감독원, 자산관리공사,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직원이 파견돼 서민금융을 지원. 시는 복지·주거상담을, 경제고용진흥원 파견직원은 일자리상담을 각각 실시. 시는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센터 이용자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금융·복지·취업서비스 확대 등 센터의 기능을 보강할 계획</li> </ul>   |
| 대전  | <p><b>‘대전통합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6월 개소 예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와 금융위원회, 하나은행 희망프라자, 대전신용보증재단, 하나미소 금융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복지재단, 일자리 지원센터,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참여. 햇살론, 미소금융, 바퀴드림론, 보금자리론 등의 서민금융 관련 상품 정보 뿐 아니라 채무조정,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각종 신용회복제도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li> </ul>   |
| 전북  | <p><b>익산시, 서민금융안정지원센터를 설치 (2014년 11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 구제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금융복지상담사 전문가 양성과정 개설. 교육생들은 강의 수료 후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파산 및 면책, 회생을 도와 새 출발을 지원하게 됨</li> </ul>   |

### 2. 주요 복지기관 및 시설 등 동향

| 기관/행사명         | 주요내용   |
|----------------|--|
| 가칭)경기도사회복지연대회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2015. 6. 5. 10:30</li> <li>• 장소 : 경기복지재단 누리실</li> <li>• 내용 : 경기도 사회복지 거버넌스 구축</li> </ul> |

#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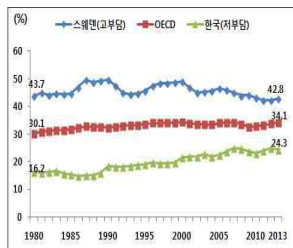
## FACT CHECK

### ‘고부담-고복지’ 모델에도 불구하고 높은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스웨덴 복지 모델의 주요 원인은?

- 스웨덴이 높은 조세부담과 복지지출 부담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배경에는 ‘복지-재정-성장’의 복지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러한 복지순환체계를 형성·유지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는 ①첨단산업의 높은 경쟁력 확보를 통한 **강한 경제적 기초 체력 토대** 마련, ②친기업적 환경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고용 기회 확대**, ③연금개혁, 복지 구조조정, 연대임금제 등 시대에 맞는 **적절한 변화 추진**, ④복지지출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 및 복지환원혜택에 대한 **복지경험기회 확대** 등이 대표적인
- 그 중에서도 **고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인세 인하 등의 ‘친기업적 환경’**이 지속가능한 복지로 이어졌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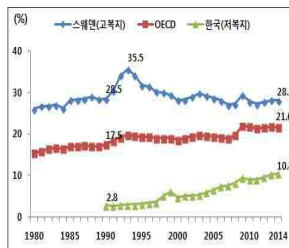
스웨덴은 ‘복지-재정-성장’ 복지순환체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복지 모델 구축

[세수 국민부담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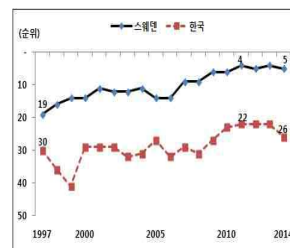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 주: 국민부담율(조세+사회보장)/GDP

[복지지출비중 비교]



자료: OECD, Stat,

[국가경쟁력 비교]



자료: IMD, 국가경쟁력순위 주: IMD 순위는 2007년부터 제공됨

# 04

## 통계로 보는 복지

### 대한민국,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UN 행복지수 국가별 순위

|     |       |       |
|-----|-------|-------|
| 1위  | 스위스   | 7.587 |
| 2위  | 아이슬란드 | 7.561 |
| 3위  | 덴마크   | 7.527 |
| 15위 | 미국    | 7.119 |
| 25위 | 독일    | 6.75  |
| 46위 | 일본    | 5.987 |
| 47위 | 한국    | 5.984 |

©경기복지재단

OECD 주요국 삶의 만족도

|         |                  |     |
|---------|------------------|-----|
| 1위      | 덴마크·아이슬란드·스위스    | 7.5 |
| 4위      | 노르웨이·이스라엘·핀란드    | 7.4 |
| 7위      | 네덜란드·뉴질랜드·캐나다·호주 | 7.3 |
| 11위     | 스웨덴·미국           | 7.2 |
| 28위     | 일본               | 5.9 |
| 29위     | 한국               | 5.8 |
| OECD 평균 |                  | 6.6 |

한국인의 항목별 점수



자료: UN, 2015 세계행복보고서

자료: OECD, 2015 Better life Index

- 국제기구들은 행복에 관한 국가별 비교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데, 2015년 한국은 ‘2015 UN 세계행복보고서’에서는 158개국 중 47위, ‘OECD 더 나은 삶 지수’에서는 36개국 중 29위를 차지함
- 국가별 비교는 각 나라의 제도와 현실을 나타내는데 일정한 한계도 있으나, 우리의 일면의 자화상을 보여주기도 함
- 특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회적 네트워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공동체 영역의 응답이 73%(평균 88%)로 최하위를 차지한 것은 우리사회의 각박한 현실을 반영

\* UN 행복지수 : GDP, 기대수명, 갤럽이 실시한 사회보장에 대한 인식과 선택의 자유, 부패 등에 대한 여론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순위가 결정됨

OECD 행복지수 (Better life Initiative: BLI) 소득, 환경, 공동체 등 11개 영역에서 경제지표 혹은 여론조사 등의 자료에 근거해 측정(ex. 일자리 : 실업률, 근로시간, 임금 등)